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1.(월) 12:00
(지 면) 2026. 6. 2.(화) 조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대전환, 차세대 인공지능정부 인프라로 혁신 본격 착수

- 2030년 노후 대전센터 폐쇄 대비, 인공지능정부 인프라로 본격 전환
- 693개 시스템 재배치에 따른 대안 마련을 포함한 혁신 ISP 착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노후화된 공공 데이터 센터에서 탈피하여 안정성과 연속성을 갖춘 차세대 인공지능정부 인프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혁신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를 계기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AI전략위')가 지난 2월 발표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정자원 내 공공 정보시스템의 개편과 차세대 인프라 전환을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은 AI전략위 산하 전담 조직(TF)이 마련한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 방안으로, ▲노후 대전센터 2030년 폐쇄 및 시스템 단계적 이전,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민간 클라우드 활용 방향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ISP에서는 ▲대전센터 폐쇄에 따른 입주시스템 재배치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마련, ▲대전센터 대체 방안 검토, ▲차세대 인공지능정부 인프라로서 국정자원 운영체계 전환방향 수립 등을 올해 말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 데이터 중요도 기반 클라우드 전환 및 재해복구 체계 고도화

우선, 2030년 대전센터 폐쇄에 따라 현재 입주해 있는 공공 정보시스템 693개를 단계적으로 재배치하는 로드맵을 수립한다.

안전한 인프라 운영을 위해 기밀 등급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고, 민감과 공개 등급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 이관을 원칙으로 하는 민간 클라우드 활용 방향과 시스템 등급별 재해복구체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스템별 재배치 방안을 도출하고,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별 세부계획도 함께 수립한다.

또한, 재배치 단계별 이행안(로드맵)과 연계하여 대전센터 폐쇄에 따른 대체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민간 데이터센터 임대, 공공 데이터센터 신축 등 다양한 방안별 운영안정성, 효율성, 비용·일정 및 재해복구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예정이며, 민간 시설 이용 시에는 국가정보통신망 연계 및 기밀 등급 데이터 보호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차세대 인프라로서 국정자원의 운영체계 전환 방향도 수립한다. 공공 정보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확대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인프라에 분산된 정보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국정자원의 운영체계 개편 방향도 마련한다.

한편, 이번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을 통해 5월 말 사전규격 공개가 이뤄져 현재 공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은 안정성과 연속성이 확보된 인공지능정부 인프라로 전환하는 사업”이라며,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차세대 인공지능정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인공지능정부실 정보자원관리혁신과	책임자	과 장	심진홍 (044-205-3090)
		담당자	사무관	김주평 (044-205-3094)
		담당자	사무관	김진웅 (044-205-3096)



(1) AI정부 인프라 안전조치 강화

□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 관리체계 강화

- 민간 수준 이상으로 배터리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전자정부법 하위 고시) 개정('26.2.11 개정 고시 시행)
- 전체 행정·공공 시스템 운영시설(1,474개) 특별조사(~'26.1분기) 및 1·2등급 시스템 운영시설 중심 배터리·서버 분리 여부 현장점검(~'26.2분기)
- 국정자원 대전센터는 '30년까지 폐쇄 및 시스템 단계적 이전 추진
 - 대전센터 시스템(693개) 이전 등을 위한 ISP*(‘26년 15억원)를 추진하고, 신속히 민간 클라우드 이전 가능 시스템은 ISP 없이 우선 이전('26~)
- * 민간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임대, 정부 소유 데이터센터 신축 등을 종합적 비교·검토

□ 재난 대비 모의훈련 강화

- DR 구축 기관에 대한 실전형 재해복구훈련 실시(年 1회 이상) 의무화

(2) AI정부 인프라 혁신

□ 재해복구체계(DR) 및 민간 클라우드 활용 방향 정립

- 국민 생활 영향도 등 고려하여, 시스템 유형별 복구 목표 기준 및 DR 구현 방식(Active-Active, Active-Standby, 스토리지 DR 등) 마련·고도화

< 시스템 유형별 복구 목표 시간 및 DR 구현방식(안) >

구분	복구 목표 시간	DR 구현방식
국가핵심 시스템(A1등급)	실시간~1시간 이내	Active-Active DR
대국민 필수 시스템(A2등급)	3~12시간 이내	Active-Standby DR
행정 중요 시스템(A3등급)	1~5일 이내	스토리지 DR

※ A1·A2·A3등급 외 대국민 편의/행정 보조시스템(A4등급)은 "소산 백업" 구현

※ 복구 목표 시간을 범위로 설정하더라도, 각 기관은 구축환경에 맞게 최대한 단축 노력

-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C등급(기밀)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S(민감)·O등급(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

□ 국정자원 재해복구체계(DR) 구축 및 시스템 재배치

- 국정자원 대전센터 시스템(693개) 중, '26년에는 134개 DR 우선 구축 (Active-Active DR 13개, 스토리지 DR 121개)
 - Active-Active DR 중, 3개 시스템(디브레인, 우편정보시스템, 안전디딤돌) 중심으로 민간 클라우드 전환 및 DR 구축 선도 프로젝트 추진
- 시스템 등급 분류 등 고려하여, 국정자원 내 시스템 재배치 로드맵 마련
 - 국정자원 대전센터 시스템 중, 별도 ISP 없이 '26년에 민간 클라우드 이전 시스템(50개 예상) 선정 및 우선 이전 추진

(3)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개편

□ AI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조직 신설

- 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과기정통부·행안부, 기획처 등) 합동
가칭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단 신설
 - 중앙행정·공공기관 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 검토 및 위기관리 방안 수립·점검을 수행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조정
 - 英 정부디지털청(GDS) 등 해외 사례 고려, 기술·혁신 기능과 디지털정부 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의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 마련